직무유기·비밀누설 광주경찰관 첫 재판

책임 수사관, 첫 재판 모든 혐의 부인

제보자 신원 등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26일 404호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A(50)경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변호사 사무장 B(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경위는 2019년 12월 광주 남구 월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 담합과 조합 비리 수사 과정에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지난해 1월 비위 관련자인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A경위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간부 경찰관에게 사건관계인 인적사항·공범 진술 내용·양형 참작 사유 등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서류 원본 사진을 보내거나 고교 동문 선배들에게 제보자 신원, 알선수재 사건 진행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기각 사유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경위가 맡았던 사건의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준 대가로 브로커 C(62)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B·C씨는 A경위의 고교 선배다.

A경위와 B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오전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브로커 C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A경위에게 청탁해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10차례에 걸쳐 조합장에게 66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전남경찰청 소속 D(53)경위와 함께 수배 사실 등을 열람한 혐의로 광주지법 형사 9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D경위는 2014년과 2016년 사건 처리와 관련해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하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해 C씨에게 7차례에 걸쳐 지명수배 사실, 주소지 등을 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D경위도 이들과 동문이다.

검찰은 A·D경위가 C씨와 함께 범행에 연루된 점을 토대로 재판 병합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별개인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A경위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또다른 브로커 E씨(전직 경찰관)도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이슬기자

거리로 나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가족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온라인 사교육 투자하면 고수익" 사기 학원장 입건

학부모·과거 제자 등 상대로 사기 행각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장에 투자하면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학부모·제자 등을 속여 10억 대 사기 행각을 벌인 학원장이 붙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6일 학부모·제자·지인에게 등을 속여 투자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학원장 A(40·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원생 학부모·과거 제자들에게 사교육업체 비대면 초등교육 프로그램 관련 투자를 권유하거나 지인에게 고수익 적금 상품을 소개하며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학부모, 성인이 된 자신의 제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비대면 인터넷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다. 비대면 초등교육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원금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고 투자 수익률도 좋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들에겐 광주 지역 신협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고이율(연 15~16%) 적금 상품이 있으니 자신 명의로 가입해달라"고 속여 돈만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자신의 부채 상환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학부모들은 광주 지역에서 오랜 기간 학원을 운영해 온 A씨를 믿고 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강압 수사 허위자백' 보험사기범 몰린 4명 무죄

법원 "허위자백 강요한 경찰 조서, 증거능력 없어"

경찰의 강압 수사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의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고의로 1차례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가 3차례 났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91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보험사기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냈다.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다. 허위 입원이 아닌데도 경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들을 수사했던 광주 서부경찰서 B경위는 감찰 결과 내사 처리 규칙을 위반(부서장 승인 없이 수사 기간 초과·보고서 미작성 등)하고,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 불문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B경위는 수사 당시 "시키는 대로 인정해라. XX 새끼, 콱 눈깔 파버리려다 놔뒀다. 가족 회사까지 싹 털어버리겠다. 부인해봐. 재수 없으면 친구 따라 징역 가는 거다"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재판장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과정 중 자백하는 취지의 일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B경위의 강압 수사와 허위 자백 강요에 의한 것이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봤다.

재판장은 "진료 기록부·간호일지·카드 사용 내역, 피고인이 실제 입원했다는 병실 환자의 진술, 고의 교통사고 역할과 행위 분담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그에 따른 병원 입원이 허위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서선옥기자

'안인득 살인사건' 국가 책임 인정될까

유족, 소송 예고

5명의 주민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안인득(44)의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어머니와 딸을 잃은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26일 대한신경전신의학회 및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방화살인 사건은 명백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국가의 책임"이라며 "사법부만이라도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선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17일 오전 4시 25분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로 평소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에 대한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비극을 낳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안인득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것에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유가족을 대리하는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안인득은 2010년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정신질환(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 7월 이후 치료가 중단돼 상당기간 방치됐다"며 "이 사건 이전인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오물 투척, 욕설, 폭력 행위 등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접수된 112 신고 건만 8회로, 경찰이 정신질환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며 "이번 청구 사건의 쟁점은 경찰 부작위 위법성과 (사건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가족도 참여해 발언했다.

유가족 A씨는 "국가가 위험 앞에서 국민을 버려둔 채 가장 먼저 도망갔다"며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와 A씨 등은 이 사건 소송을 다음 주 내로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광양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 정차 금지 당부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 정차를 금지하도록 당부했다. 광양=심종섭기자

광주남부소방,구급차 출산 산모 아기 100일 맞아 안전센터 방문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지난 7월 19일 119구급차에서 출산한 산모의 아기가 100일을 맞아 남부소방서 송하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광주동부소방, 신속한 현장도착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지난 22일 오후 재난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도착과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국립공원공단, 마을 내 수목 식재로 탄소흡수원 확충에 앞장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재동)는 22일에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립공원 명품마을 경관 개선을 위해 30여명이 국립공원 도원명품마을 내 수목 식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해양경찰교육원, 2021년 연구논문 발표회 개최

해양경찰교육원(원장 김성종)은 지난 21일 오후 교육원 소강당에서 교육원장과 각 과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및 학과 연구논문 발표회를 열어 최우수 논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완도해경,'로고젝터'설치로 수상레저 안전문화 밝히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매년 증가하는 야간 수상레저활동 수요에 따른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과 활동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홍보 일환으로 '로고젝터'를 설치했다. 완도=이민혁기자